

## 인도-태평양 안보정책포럼

입력 2024.06.11 15:56 업데이트 2024.06.11 15:58



설인호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최근 국제 학술세미나인 '인도-태평양 안보정책포럼'이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 주최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지난해까지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이란 이름으로 매년 개최됐는데, 한국 안보·국방정책의 지역적 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미나로 기획됐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비롯해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각국의 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인식을 비교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미국을 대표해 미 국방대(NDU) 국가안보문제연구소(INSS)의 저스틴 앤더슨 박사가 참석, 미국의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의 피터 헤이먼드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역 국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와타나베 다케시 박사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핵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며, 쓰카모토 가쓰야 박사는 일본의 지역 질서 인식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했다.

본 행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국방대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박영준 소장이 각각 제1세션과 3세션의 사회를 맡았다. 국방대 전략학부 김태현 교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놨고, 안보정책학부 유상범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점검했다. 국립외교원의 조양현 교수, 한국국방연구원의 함형필 박사, 통일연구원의 정성윤·이기태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박사도 참가해 주제별 발표와 토론에 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일 3국 전문가들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됐다. 3국 전문가들은 모두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 필요성도 환기됐다.

북핵의 억제태세에 대해선 유의미한 차이점도 포착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일본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관련국 모두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